

한파에 난방비 ‘폭탄’ 서민들 ‘3중고’ 덜덜

광주 도시가스료 MJ당 20.71원
전년비 35.8%↑ 추가 인상 예고
에너지 수급·고환율 등 영향 원인

설 연휴 직전 날아온 난방비 고지서가 동장군보다 무섭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1년 사이 30% 넘게 오른 난방비는 추가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 서민들의 가계 사정이 더 팍팍해질 것이란 우려까지 나온다. 서민들은 이구동성으로 “난방비 걱정에 겹나서 켜겠냐”는 웃픈 하소연을 하고 있다.

26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따르면 이달 광주 도시가스 소매 요금은 1MJ당 20.71원으로 지난해(15.24원)보다 35.8% 올랐다. 지난해 4·5·7·10월 4차례에 걸쳐 MJ당 5.47원 인상됐다. 도시가스 요금은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를 수입하는 한국가스공사가 도매 요금을 책정하고 각 시·도가 공급 비용을 고려해 소매 요금을 결정한다.

열 사용 요금(난방·온수 사용량을 계량기로 검침해 부과하는 요금) 역시 지난해 3월 말까지 1Mcal(메가칼로리)당 65.23원에서 89.8원으로 37.8% 올랐다. 열 요금이 오른 것은 2019년 8월 이후 약 3년 만이다.

난방비가 급등한 배경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 에너지 수급난과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 고환율 등 ‘3중고’가 맞물려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전기요금도 오르면서 서민 부담은 가중되고

있다. 전기요금은 지난해 킬로와트시(kWh)당 19.3원 오른 데 이어, 이달에도 13.1원 인상됐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검토 중이다. 난방 요금이 오르자 여기저기서 서민들은 아우성이다.

서구 금호동 30평대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부 임 모씨(63)는 이번달 도시가스 고지서를 받고 놀랐다. 평균 9만~11만원을 냈던 도시가스 요금이 이달에는 17만원이 나왔기 때문이다.

임씨는 “지난달보다 7만원이나 더 나온 고지서를 보고 당혹스러웠다”며 “직장인인 남편과 자녀가 돌아오는 저녁에만 보일러를 1시간 정도 돌리고 나머지는 외출모드를 사용한다. 난방을 많이 틀었다면 그런가보다 하겠지만 해도 너무한 것 같다. 여기서 어떻게 더 아끼나 싶다”고 말했다.

지역 맘카페에도 난방비에 대한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20도에 온도를 고정해놓고 쓰는데 20만원 나왔다”는 게시글에 “다음달이 더 걱정이다”, “아파트 관리비 30만원 처음 내봤다”, “이번달 더 추웠는데 걱정된다”는 내용의 댓글이 이어졌다.

원룸에서 자취를 하는 대학생 강수연씨(25)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한 달 사이 도시가스 요금이 6만원에서 9만원으로 훌쩍 올랐기 때문이다.

강씨는 “인근에 살고 있는 친구들도 도시가스가 많이 올랐다고 이야기 한다”며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과 아르바이트를 해서 받은 월급으로 한 달을 뼈대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나기는 어느 때보다 힘들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가 26일 오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무력화를 즉각 중단하고 책임자 강력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김태규 기자

중대재해법 시행 1년...현장 안전사고 ‘여전’

작년 광주 사망 35·부상 3,047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광주지역 산업현장에서는 안전사고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최근 4년간(2019년~2022년) 노동청에 접수된 광주지역 산업재해건수는 1만 1,775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2,630건(사망 35명, 부상 2,595명), 2020년 2,851건(사망33명, 부상 2,818명), 2021년 3,212건(사망 30명, 부상 3,182명), 2022년 3,082건(사망 35명, 부상 3,047명)로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022년 1월 27일) 이후 산재로 인한 사망자와 부상자는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였고,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돼 수사받은 업체는 14곳이었다.

하지만 검찰에 송치된 업체는 4곳에 불과했고, 기소된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

이처럼 중대재해법이 시행된지 1년이 지났음에도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가 늘고 있어 법안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노동자의 처벌 조항을 확대했으나 지난 1년간 말단 관리자 처벌과 솜방망이 처벌로는 중대재해를 막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은 기업 처벌 조항은 축소하고, 노동자 처벌 조항은 확대하는 경연계의 요구를 수용했다”며 “중대재해는 증가했고, 노동자 시민의 참혹한 죽음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은 사업장 내 중대재해가 개인의 과실이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적이고 구조적인 범죄임을 사회적으로 합의하고 확인한 결과이다”며 “정부는 신속한 법 집행을 통해 경영책임자를 엄정 처벌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하도록 즉각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찬기 기자

경찰, ‘횡령 의혹’ 지역농협·행안부 압수수색

지역 단위 농협 비위 의혹을 수사하는 광주경찰이 해당 농협과 행정안전부 등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6일 수사관을 보내 광주 A 농협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 등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A 농협 관련자들의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이고, 상세한 혐의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익명의 제보에 따르면 A 농협 간부가 각종 사업을 진행하며 횡령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

이 제기됐다.

또 조합장이 정부 훈장을 행안부 간부에게 금품을 주고받았다는 비위 의혹도 나온 상태다.

경찰의 행안부 압수수색은 이 같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압수품을 분석해 혐의를 구체적으로 규명할 방침이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환준 기자

‘메신저 앱’ 마약 구매 20~30대 13명 적발

메신저 앱으로 마약을 구매해 상습 투약한 20~30대 직장인, 자영업자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남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39)를 전날 구속 송치하고, 20~30대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 필로폰 1.5g(90만원 상당)을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12명도 같은 기간 메신저 앱을 통해 필로폰, 대마 등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광주·전남·부산·경기·강원 등 전국 각지에 거주하는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들로 확인됐다.

경찰은 메신저상에서 마약이 유통되는 흐름을 포착하고 거래 계좌를 추적해 구매·투약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A씨가 비슷한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을 토대로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찬기 기자

광주·전남 혈액수급 위기경보 ‘주의’ 진입

광주·전남지역 혈액 보유량이 3일분 아래로 떨어지면서 혈액수급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진입했다.

26일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혈액원에 따르면 지역 내 혈액 보유량은 ▲B형 3.9일분 ▲A형 2.7일분 ▲AB형 2.4일분 ▲O형 1.8일분으로 평균 2.7일분이다.

보건복지부는 혈액 보유량을 기준으로 3일분 미만은 주의로 분류된다. /민찬기 기자

최고의 품질과 성실 시공으로 고객만족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최고의 품질, 글로벌 일류기업
(유) 모던라인트크

조달청등록업체

01
화장실
칸막이

02
실내벽체
마감패널

03
벽천장용
흡음재

TEL. 062) 512-6662 FAX. 062) 512-6663
광주광역시 동구 독립로 330 (계림동 924)